

|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 토론회 |

Covid19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상생협력 모범 사례 소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11일(수)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의 발족 이후 1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노사정이 함께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부에서 'Covid19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는 상생협력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짚었다.

상생협력 모범 사례로는 '중앙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 협력사례', '지역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충청남도 사례', '대기업의 노사상생협력으로 SK 이노베이션 사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한솔제지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앙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 협력사례를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20.2.12.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고사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자, 김동명 위원장이 중소기업의 위기가 곧 노동의 위기라고 답하며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20.7.13.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한국노총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한 사례를 설명했다. 그리고 향후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 발굴 및 정책건의 위한 불공정 실태조사 공동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이원복 행정주사는 지역단위 노사상생협력으로 충청남도 사례를 소개했다. 충남 노사정은 노사정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1) 노사민정 공동선언, 2) 고용노동 컨퍼런스 개최,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 활동, 4)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 개발, 5) 일 생활 균형 실현 문화 확산, 6) 노사상생을 위한 협력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및 문화 확산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1) 혁신주도형 업무협약 체결, 2) 양극화 대응 추진전략 수립, 3) 원하청 상생협력 추진계획, 4)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SK 이노베이션 이성훈 노조위원장과 현재범 인력팀장은 대기업의 노사상생협력으로 SK 이노베이션 사례를 소개했다.

SK 노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17.9. 단협에서 1% 행복나눔 상생협력기금을 조성

및 활용하기로 합의한 후, 구성원 97%가 적극 참여하여 ‘20년 기준 56억 4천만원 모금하였다 고 말했다. ’19.7. 단협에서 협력사 구성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가 협력사 공동근로복지 기금 조성에 합의하였고, SK 노사는 수혜대상, 출연금 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공동형으로 추진함. 현재 30개사 1,23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데, 확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솔제지 김용기 이사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한솔제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했다. 한솔제지는 2013년부터 상생협의회에서 40개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술협력, 금융지원, 교육지원, 소통강화로 구분하여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부의 주제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에서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일자리 양극화 원인과 추세’를 분석하고, 이덕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의 경과 및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의 원인을 근속 > 산업과 직업 > 사업체 규모 > 교육 격차 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향후 일자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변화가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성 연구위원은 “임금 양극화와 관련하여 사업체 간 격차가 사업체 내 격차보다 중요”하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거래 공정화, 초기업단위 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 상생협력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출범 1년을 사회적 대화와 연관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매우 심각하고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 및 정책들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다”면서, “2차년도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양극화 현상 및 원인 진단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

형성을 기반으로 노사정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의 활동이 노사정이 함께 양극화 문제 인식 및 원인 진단 등을 하는 기반 다지기였다면, 앞으로 1년은 노사정이, 특히 노사가 중심이 되어서 양극화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수봉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발족 이후 지난 1년 동안 양극화에 대한 현실 인식과 양극화의 원인진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그 활동들을 보고하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오늘 모색한 향후 과제들을 토대로 노사정 3주체가 액션플랜을 만들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